

##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말씀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이용률 72.8%,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댓글에 울고 웃고, 또 기업들은 댓글 마케팅을 하고, 정치인들은 댓글 정치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강력한 콘텐츠 생산자로 부상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급기야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영국의 가디언 지가 전 세계에 알린 내용입니다. 정말 인터넷 대통령답게 여러 네티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뵈게 되니까 반가우시죠? 무엇보다도 취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대통령** ● 예. 아직까지 2년이 남았죠.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매우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자** ● 앞으로 남은 2년이 우리 모두의 2년이기 때문에 힘을 모으자는 뜻에

서 오늘 우리 네티즌들이 대통령님을 초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는데 대통령님께서도 네티즌이시죠?

**대통령** ● 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되는 편입니다.

**사회자** ● 댓글도 많이 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브리핑이라는 정부정책 사이트가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거기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 봤는데 시비가 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사회자** ●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오늘 만남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에서 올해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하셨고, 국민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년연설에서 토론과 논쟁이 치열할수록 해법은 분명하게 잡힐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이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하면 모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양극화를 이해합니다. 중소기업하는 분들은 대기업에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느끼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또 수도권과 비교해서 이것은 또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서비스업하는 사람들은 제조업과 비교해서, 제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IT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비교해서 또는 수출과 내수를 비교해서 심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양극화가 제일 심하고 본질적인 것은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 재산의 양극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극화가 궁극적으로 깔때기처럼 딱 몰리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재산의 양극화, 그리고 점차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제가 양극화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놔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양극화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성장 쪽에 치중하지 않고 분배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는 질문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환위기와 지난번 가계부채 사태라든지 하는 경제위기를 두 번 거치면서 양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인터넷 대화를 저희가 편의상 5개 주제로 나눠 봤습니다. 일자리, 부동산과 교육, 재정, 복지, FTA 이렇게 5개 주제를 패넬들께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쉬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과거 불균형 성장과 IMF 후유증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도 못했고, 또 해결의 가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바로 돼야 대책도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을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니계수나 소득분배율 등을 가지고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양극화 추세 표가 나오는데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의 선을 보시면 1993년이 제일 낮습니다. 낮은 것일수록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996년에 가서 아주 많이 나빠집니다. 1997년 오면서 조금 좋아지다가 1997년 말에 우리가 외환위

기를 맞고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지니계수가 올라갑니다.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1999년까지 진행되다가 2000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2002년까지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빠진 지점을 한번 보시면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소위 가계부채, 카드사태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개방이 있었습니다. WTO 가입도 있고 OECD 가입도 있고 국내적으로 금융제도를 대폭적으로 개방하는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1993년에서 1996년까지 올라가다가 1997년에 개선되는데 이때는 왜 개선되느냐 하면, 아래쪽이 나빠져도 올라가지만 위쪽이 나빠져도 개선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소득자가 오히려 나빠지니까 1997년에 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 부도가 많이 났으니깐요. 그것은 착시현상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위 소득자들의 형편이 풀리지 않았지만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1998년은 정말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 한쪽에는 '이대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리는 사람은 그냥 몰렸습니다.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양극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통령께서 '양·극·화·해·소' 중에서 하나 골라 주시면 그 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 제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사로서 '해' 자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해' 자는 부동산과 교육에 관한 문제군요.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해결 의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A+ 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 면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8·31대책'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언론을 보면 일부 지역이겠지만 또다시 원상회복이니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자기 집 마련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집값은 잡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부동산 문제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국민의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양극화의 핵심적인 결과가 부동산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산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는 우리 대외경쟁력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또 서비스 부문까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빠질 때는 다 경제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표에서 보신 대로, 양극화가 또다시 증폭되면서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하느냐? 예, 자신합니다.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습니다. 지금 8·31대책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딱 짧게 표어로 말씀드리면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정책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정책이 순조롭게 가는데, 그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내용이 부실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시

간이 흐르면 결국 저항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올리지만 부동산 가진 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날마다 올라간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실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그러면 거래를 하지 않은 부동산도 주변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가치평가가 되면 공시지가가 전부 실거래가액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0.7% 내지 2%의 보유세가 해마다 나옵니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부동산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지 않고 끌고 있다가 뒷날 팔면 대체로 7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부동산이 12%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투기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똑같은 정책을 보고도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사항대로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책 별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8·31대책의 위력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좀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제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도 없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2년 동안 4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제위기 같은 것을 다시는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반드시 풀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국회도 해야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뒤를 받치면 국회는 국민여론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강남은 약 2%, 전국 평균은 0.6%, 서울은 그 중간 정도 이렇

게 일시적으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투기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편에서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같은 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평준화정책은 잘하는 학생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이 평준화에는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수월성이라든지 특수한 방향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수월성을 추구하자면 평준화를 깨야 하고, 또 평준화를 지키자면 우수한 교육을 봉쇄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걸려서 고민하는데, 저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열화하는 것과 특수화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 기회를 함께 가지고 보편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가면서 특수성이 보편화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특수성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편화해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됩니다. 보편성은 보편성대로 유지하고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출한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재는 인재대로 특수한 소수의 비율로서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특수성을 내세워서 전 국민 서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교에서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전 국민을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수준, 그리고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특수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의 원리를 보편화해 버리면 전 국민 서열화로 가

버리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을 망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창조성과 사회성 아닙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보서는 창조성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환경이나 출신이 어떻든 간에 교육의 기회는 다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요구이고, 또 사회성 교육이나 창조성 교육을 하자면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학원에서 창조성과 사회성 교육은 되지 않거든요.

다양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생마다 다른 코스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공교육 영역에 있는 것이지 학원에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면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 내신평가에 의한 입시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일적 평가방식으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그 방식에 의해서 자기의 평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대학입시가 평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고쳐져야 합니다만, 대학입시에서 획일적 평가방법을 요구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최대한 높여서 공교육을 살리고, 대학교는 대개 그런 과정에서 상위 1%, 상위 5% 안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변별력이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이미 수능 9등급에 상위 5% 정도는 충분히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신에서도 학교 간 편차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집단에서의 우수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과목별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교차시키면 1% 이내의 인재를 충분히 고를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를 찾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뽑는 경쟁이 아니라 키우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닥쳐 있는 교육 문제가 이 설명 안에 대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는 지금 핵심이 대학입시제도이고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부차적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 질문은 복지 분야네요.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자유롭게 질문 올리는 중에 복지 분야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따로 하나 정했습니다.

**질문** ●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영세민에게 전세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하기에 너무 반가워서 은행문을 두드려봤더니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이것이 진정 영세민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들 중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혈세라고 말할 만큼 세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전세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 있게 부작용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거저 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못주고 빌려주는 것이지요. 빌려주니까 반드시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돌려받으려고 하니깐 일반 은행에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판단해서 관리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까다롭게 안볼 수가 없는 애로들이 아마 실무하는 분들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그것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일선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좀 감수를 해 주시고, 도저히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다른 어떤 구제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잘 선택해서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가 되니까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규제가 적고 세금이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면 돈 많은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돈 쓰고 저축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시장이 메말라 가게 됩니다.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시장이 활발하면 규제가 있어도 투자를 하지만, 시장이 죽어버리면 규제가 한 개도 없어도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시장은 국내이고 대기업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 주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그것이 또 양극화를 해소하게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기업도 잘되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성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1월에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적 합의라고 했을 때 세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샐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샐러리맨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제가 작년에는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대신 선진한국과 동반 성장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아서 말 안한 것이 아닙니다. 양극화 얘기를 꺼내면 ‘세금 올리자는 말이지.’ 이렇게 되면 바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언론환경이 제게 그렇게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금 얘기 나오면 국민 지지는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시끄럽게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올해에는 정말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

까 올해는 허리가 쭉 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숨쉬기 좋은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극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금 올리자는 말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금 내라는 말이나?’ 는 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방법에 대해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런데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월급쟁이가 봉이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자영업자와의 사이에서 형평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득세를 보면 근로소득세의 90%를 상위 20%가 내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구조라면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상위 20% 외의 사람들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TV나 신문을 보면 마치 전 봉급자들이 꺾기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어디 갔다가 돌 맞는 것 아닌가 싶어 겁이 나는데, 내 소득이 상위 20%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한숨 돌리고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쪽으로 가면 전체 소득의 96.7%를 상위 20%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에 있는 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필요하면 낼 것은 내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든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하경제를 아주 부풀려서 계산하는 분도 있고 해서 국세청 계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이제 탈세 같은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참여정부 국세청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출발할 때 경제 어렵다 해도 접대비 50만 원 관철했습니다. 그동안 불로소득,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확실하게 했고, 현금영수증제도 등과 같이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을 투명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는 분들이 사회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세청이 제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가 봐요. 국세청이 달라졌습니다. 조세형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올해 경제 회복 추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올해 경제는 언제쯤 어느 정도 풀릴지, 이번에 풀리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 될지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언제 얼마이든 간에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계속 잘 갈 겁니다.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그리고 여러 연구소 보고를 계속 받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맞고, 단기적으로 하나하나 미세하게 지역적으로 보면 항상 틀립니다. 언제 얼마인가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요인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292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한 30만~40만 명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가계부도도 계속 나고 있었던 거죠.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부도를 내고 그래서 2004년 4월에는 383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05년 말에 다시 294만 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92만 명 아래로 내려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의 소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축돼 가지고 사회활동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선 풀렸으니까 시장에서 소비는 좀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스템의 위기요인이 없습니다. 2003년에 4천~5천 원 선에 있던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15,000원하는 바람에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엄청 값이 비싼데도 서로 사겠다고 경쟁합니다. 이만큼 우리 경제가 체질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체 경제가 꼭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망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 금융의 부실요인이라든지 위기요인이 없습니다. 경제에 위기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위기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숨 좀 돌리고 다시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위기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쓰시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분들도 우선 좀 쓰고 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이 제일 어려운 건데, 국민연금제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연금제도를 해결하지 않고 버티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노후를 연금으로 상당한 보장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안되면 이중 삼중의 다층적인 노후보장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아니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쓰시고, 또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해서 한번 자신 있게 가 봅시다.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개방과 경쟁이 중심이 되는 FTA와 복지가 강조되는 양극화 해소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면 어떤 방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것인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 FTA라는 것은 개방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개방이지요. 개방은 세계 시장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문을 활짝 연다 이런 뜻이지요. 또한 그럴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걸 그냥 두면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성원 모두가 그저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또 더불어 가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방과 세계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우리 사회가 선진민주주의 사회, 선진경제로 가는 양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고, 또 국민이 함께 가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 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좌파정부' 아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정책 할 것 하고 우파정책 할 것 하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라고 합니다. 이론적 틀 안에 자꾸 현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좌파이론이든 우파이론이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써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이지요. 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역사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은 없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발전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역사라는 것이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 이론적인 이념적 틀 속에 국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 안에 여러 가지 이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조화가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조화해서 가는 것이 바로 양 날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을 전제로 해 두고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원체 중요한 시장이고, 상징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조업은 거의 세계 일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법률·세무·컨설팅·디자인 등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나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은 아직 세계 일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 서비스로서 쓰는 것이 그 분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이 아직까지 세계

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 환자들이 나가고 유학도 많이 나간단 말이지요.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하러 나가는 사람 나가고 공부하러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치료받으러 나가는 사람 나가고 치료받으러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요. 은행도 가야 됩니다. 각종 개발투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리는 개발투자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한테도 못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FTA 한다고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해서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면 독립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면 집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나가서 경쟁해서 죽든지 살든지 성장해 봐라,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도전해서 성공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반도체·전자제품·IT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도 열추다 가고 있고, 지금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도 슬슬 살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뛰니까 일할 수 있게 한번 밀어주자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시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FTA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크린쿼터 얘기 같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 대통령께서도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영화계 쪽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굴복이 아니냐, 압력이 아니냐 해서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영화에서만 매력적인 줄 알았더니 실물 봐도 아주 잘생겼네요. 우리 한국 영화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자신 없습니까? 한국 영화, 우리 영화 시장에서 아주 나쁘게 봐도 40~50% 이상의 점유율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까?

**질문** ● 자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쟁력이라고 해 봐야 미국 영화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만든 영화들이 물량공세나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압력에 의해서 보여드릴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관객의 선택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 저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미국 압력을 받아서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자존심이나 불쾌감이 실제로 반대운동에 더 많



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정말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있으면 열고 당당하게 나가야지요. 멕시코 가도 우리 드라마 하고 있고, 이집트 가도 우리 드라마 하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 세계로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문화적 다양성이나 문화의 정통성은 모두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류하지 않은 문화는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교류 열어 놓고 능동적으로 나갑시다. 미국한테 이 문제 말고도 앞으로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 될 수 있습니다. 안보나 외교 분야에 있어서 하나하나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많이 달라졌고,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선입견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게 굴복하는 것 아니냐, 압력 아니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쿼터 운동하시는 분 저도 잘 아는데, 우리 영화인들이 독립예술영화 분야가 취약하니까 국가에서 보호해 달라든지, 재정지원을 해달라든지, 상영관을 확보해 달라든지 해서 정부가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 여러분의 경쟁력을 좀더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하고 말도 안한다 이러니까 정부도 지원을 하긴 해야겠는데 대화가 안되니까 정부 지원책 따로 굴러가고, 수요자가 없으니까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반대만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문을 열면 체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월드컵 나가려고 하면 연습해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갑시다. 내부적으로 경쟁력 키워서 밀고 나갑시다. 좀 자신 있게 갑시다.

**질문** ● 대통령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댓글 정치가 화제를 낳으면서 대통령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주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 가시는지요. 국정브리핑에 댓글을 다셨는데, 일반 국민들이 쓴 글에도 댓글을 다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통령** ● 일반 사이트 자유게시판 같은 데는 못갑니다. 저는 아침에 30분, 저

녁에 30분 이렇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준입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e-지원'이라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접속해서는 대부분을 국정브리핑 사이트에서 보냅니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맞춤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큰 포털사이트에 우리 청와대 블로그가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나갔는지 둘러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회 흐름은 모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전체 흐름을 다 분석하고 취합해서 보고받기 때문에 직접 서핑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제가 댓글을 단 것도 전부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서 그것을 선거에서 대세로 몰아간 아주 희귀한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유용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이 저의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저를 지원하는 글이 많았는데, 요새 보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박살나고 있더군요.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네티즌당'을 만들면 저도 당원으로 끼워 주십시오.

**질 문** ●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만약에 손녀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리지 않으신다면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나라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지요. 그나저나 제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정부나 권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투명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도에서 일부 나오듯이 2003년부터 소위 산업 스파이를 열심히 잡고 있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제가 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국정원도 민주적인 기관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청도 요새 일반 서민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힘센 사람들과 가까운 것 같았지만 요새는 힘센 사람들 조사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국민의 지위가 좀 향상되고 사회가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소위 힘센 사람들끼리 유착했던 구조는 다 갈라져 버렸어요. 정치권과 재계, 또 정당 안에서도 대통령과 당이 분리되고 권력기관도 그렇지요? 옛날에는 언론하고 뭔가 쑥덕쑥덕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서로 적절하게 견제하는 관계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나라를 바란다는 것은 없고, 그냥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가는 나라,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서는 나라, 지금 당장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몸 아플 때 치료비 걱정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아이 낳으면 보육 걱정, 교육 걱정, 취직 걱정, 노후 걱정인데 이런 데 대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이 되어 있고, 멀리 내다봤을 때 희망이 있고 불안이 덜한 나라, 이런 나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일보했다 자평도 하고 싶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눈부신 진보는 없지만 훨씬 안정되고 제도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데모하고 할 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 가서 데모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데모하면 평생 취직길이 막혔습니다. 당시 내가 변론을 해 줬던 학생들은 평생이 막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데모하다가 걸려서 평생 앞길이 막혀버린 사람들, 내 아이가 거기에 섰다고 생각하면 데모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불의를 보고서도 불의라고 말도 못하는 자식 키우면 뭇 하겠냐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 5학년 때쯤이었는데, 대학교 가서도 걱정 안하고 잘 지내고, 요새도 잘 지냅니다.

이제 손녀를 위해서 우선 개인적으로 농촌의 자연을 복원하고, 농촌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아름다운 농촌, 가급적이면 고향에 가서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스런 손녀를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고향을 아름답게 꾸며 놓고 올챙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메뚜기도 있는 마을을 꾸며 놓으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하는 국토공간에 대한 제 이상입니다. 아름답고 생명이 살아 있는 농촌을 복원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정책은 그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우선 그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노동인구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유용성을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 법안도 허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무원 수는 대폭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일반 기업처럼 경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생산성 높은 작은 정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 양극화 해소의 첫 번째 방법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역시 경제가 활발하면 좋습니다. 경기가 활력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또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은 국민들도 이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현상 때문에 중소기업, 서비스업 쪽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덴마크 사례에 대한 언론의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고용지원정책,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은 확실하게 하려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숫자가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부 자료를 찾아봐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아직 일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번 넣어 보자는 것이죠.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하자 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반드시 들게 하고 특수한 저임금이 아닌 한 연금이라든지 그 밖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게 하고, 마지막에 차이를 줄이는 것은 임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차이가 참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정하려다 보면 엄청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판례를 축적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줄여 보자고 해서 줄이는 쪽으로, 비정규직 위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기업의 문화와 경영전략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 버리면 얼마든지 탈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는 데 따르는 기업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

규직을 매일 그렇게 회피하는 부담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단기적인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에 여유가 생기면 장기 전략을 가지고 정규직을 많이 늘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규직을 해고 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기업은 정규직을 쉽게 채용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파견근로를 일부 합법 부문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뻔하게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문이 합법 분야가 아니면 보호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 부문에 넣어 주어야 보호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산업 부문을 불법화해 놓고 있지만 불법이라도 보호제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외곽지대라고 해서 전혀 보호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논리의 모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현실이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보호는 보호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문이 불법인 경우에 보호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쓰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위법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지나친 차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또 다른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받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제도, 직업훈련제도 부문은 올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전문가가 늘어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해서 결국 전체의 국가제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직업안전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 부문에 관해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시비가 있는데요, 정부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경제 중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 크면 클수록 큰 정부죠. 전체 직장인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그것에 따라 큰 정부, 작은 정부로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간호사 한 사람당 담당 국민 수가 499명입니다. 일본은 136명입니다. 고용 서비스로 보면 한국은 고용안전 상담사 한 사람이 7,80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420명에 한 사람이 서비스해 줍니다. 소방관, 이걸 국민 안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1,66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당 한국은 509명인데 미국·일본·프랑스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당 학생 수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서비스가 안전 서비스입니다. 식품안전도 포함해서요.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숫자 가지고 이 정도의 국가 서비스를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걸 지금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많은 만큼 기획하는 정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GNP 대비 재정규모를 보면 한국 27.3%, 미국 36%, 일본 37%, 영국 43%, 독일 47%, 프랑스 52%, 스웨덴 58%입니다. 이것이 결국 민간경제에서 정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규모에 있어서 큰 정부는 무슨 큰 정부입니까? 절반도 안되는 정부를 가지고 큰 정부 타령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든 교육하는 사람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남의 나라 책 자꾸 베껴 와서 큰 정부 때문에 경제가 잘 안되는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에서 우리도 작은 정부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돈이 돌아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양극화 지니계수를 6.6% 교정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4.2% 교정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참여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6.6%까지 교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지니계수를 평균 60% 정도 깎는다고 할 만큼 국가재정을 거치고 나면 지니계수가 훨씬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한국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자꾸 큰 정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자** ●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권력을 스스로 버리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후회는 안하십니까?

**대통령** ● 그거 하려고 대통령 했으니까요.

**사회자**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강력한 처벌방안이 있으신지요?

**대통령** ● 우리 사회 윤리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하고 법만 들고 앞장서서 나가서는 성공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의 윤리의식이라고 할까, 시민적 자율의 영역이 넓어지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소신이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 대체제도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인권과 관련될 만한 문제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것이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사회적 여건, 소위 자율과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다면, 저는 인권침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권력 유지라든지 무슨 특별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용납할 수 없겠지만, 그야말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히 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더라도 안전을 지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대단히 자유주의적이지만 그 점에 관한 한 대단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한명숙 의원과 김병준 정책실장이 후보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소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청문회하는데 보니까 소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질적인 소신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켜 가야 하고 개인의 소신이 장관의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장관의 정책은 나라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타협과 조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서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총리 문제도 제 소신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야 되고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직 방향마저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통령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뜰하게 질문 준비하시고, 또 나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것이 답이다 했던 것이 지금 맞지 않게 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여전히 답이라는 생각을 유지해 가고 있

습니다. 몇 가지는 답이 안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물론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에 속하는 기본은 바꾸지 않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바꾸자, 가치에 대한 인식은 그냥 가져가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빨리 바꿀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책임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과 책임,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또 사물을 둘러싼 주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해답을 내고, 내가 오늘 했던 얘기가 어제 했던 얘기와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유도 없이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혼란스럽고 남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것이죠. 해답을 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그래서 내가 한 대답에 대해서 만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대통령에게만 필요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정치인에게도 필요하고 언론에게도 필요합니다. 사회 지식인에게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여론이 사회의 흐름을, 사회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니까요. 네티즌들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자기 스스로 전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터넷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터넷에서 주

교받는 논쟁, 교환되는 정보의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외교관계라든지 안보관계라든지 하는, 소위 전략적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상당히 잘돼 있다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는데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사,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본질적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고 오늘의 현실과 대조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좌파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같기도 하며, 미국한테 자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이름 있는 학자가 아니라 재야 연구자가 쓴 것인데 이 책 쓴 사람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